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출자	국무위원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 「민법」, 「공탁법」에서 정한 회수 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갈 위험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

이에 공탁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3 신설)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0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공탁물 회수의 제한)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(제5조의2에 따른 공탁을 포함한다) 공탁자는 제9조 및 「민법」 제489조에도 불구하고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함을 통고한 경우
  2. 공탁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(단, 기소유예는 제외한다)이 있는 경우
- ② 전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제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탁자가

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5조의3(공탁물 회수의 제한) ①</u>  <u>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</u>  <u>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</u>  <u>경우(제5조의2에 따른 공탁을</u>  <u>포함한다) 공탁자는 제9조 및</u>  <u>「민법」 제489조에도 불구하고</u>  <u>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.</u> 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</u>  <u>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1.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</u>  <u>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</u>  <u>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함을 통</u>  <u>고한 경우</u></p> <p><u>2. 공탁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</u>  <u>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</u>  <u>불기소 결정(단, 기소유예</u>  <u>는 제외한다)이 있는 경우</u></p> <p><u>② 전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</u>  <u>회수제한에 관한 방법 및 절차</u>  <u>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</u>  <u>으로 정한다.</u></p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2110 - 3511